

#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노사정협의 본격화

## 항운노조원 고용·근로조건 보장·임금지급방식 협의

인천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개편위원회(위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오공균)가 4일 개최되어 인천항 항만노무인력 상용화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는 8월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노측 개편위원인 인천항운노조 최정범 위원장, 이해우 부위원장, 최두영 쟁의부장, 김세룡 제5연락소장 등 4명과 사측 개편위원인 심충식 인천항만물류협회장, 김승희 영진공사 대표이사, 김주희 대한통운 인천지사장, 안덕진 한진 인천지역본부장 등 4명, 공익 개편위원인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개편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상호 신뢰 속에 협상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천

항의 항만노무인력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기본 합의서 체결 후 실무협상단을 조기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6월28일) 및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구성(8월4일)에 이어 실무협상단이 조기 구성되면 인천항의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협상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상용화 도입이후의 항운노조원의 고용, 근로조건 보장 방안, 임금지급방식 및 하역사별 인원 배분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

평택항의 화물유치 촉진을 위해 선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화물유치 인센티브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인센티브제의 주요내용은 △2006년말 기준 총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24만TEU 이상 처리한 업체 △2005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동량 처리업체 △신규취항 선사는 전체 처리 물동량에 대해 인센티브 비율과 표준 하역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취항 선사에 대한 운항 손실 보전금, 중국의 환전화를 취급선사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하역료, 운영 사별 목표 물동량을 설정 등 선사를 위한 인센티브제 뿐만 아니라 부두운영사, 화주 등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수 경기도 경제항만과장은 "평택항은 지금까지 부두가 부족해 밀려드는 화물을 수용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컨테이너부두가 2개로 늘어난다"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2010년까지 100만 TEU의 물동량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